

AI·데이터·신재생에너지...광주·전남 선점사업 총망라

160조원 투입 '한국판 뉴딜' 광주·전남 관련사업 뭐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광주와 전남도는 그동안 준비해온 관련 사업에 대해 정부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비 44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뉴딜은 광주, 국비 73조4000억원이 배정된 그린 뉴딜은 전남이 각각 주안점을 두면서 광주·전남이 상호협의를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의 직접 투자가 예상되는 이번 기회를 광주·전남 산업의 혁신 및 경제성장의 대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전략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인공지능(AI)·데이터 등 디지털 뉴딜 중심= '디지털 뉴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등 소위 D·N·A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가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 AI, 데이터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광주에 퍼커스가 맞춰진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는 이미 지난 2019년 1월 정부로부터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이끌어냈다. 이후 국가사업으로, 집적단지가 들어설 첨단3지구가 지난해 12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AI 중심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뒤 5년간 4116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세계적 규모의 빅데이터 센터를 착공한다. 이들 데이터를 처리할 세계 10위 내에 드는 성능과 용량을 갖춘 슈퍼컴퓨팅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 가운데 ▲1·2·3차 전 산업으로의 5G·AI 융합 확산 ▲도시·산단

44조 투입 '디지털 뉴딜'은 광주

73조 '그린 뉴딜'은 전남 맞춤형

정치권 등 지역역량 총동원

산업기반 대전환 기회 만들어야

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교통·디지털 트윈·수자원·재난 대응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등에 있어서 광주와 전남이 함께 발굴·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프로젝트 및 예정 사업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살펴볼만하다.

◇전남 해상풍력·스마트 농어촌 등 그린 뉴딜...상호 협의의 사업 발굴해야=전남은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그린 뉴딜' 분야를 선점해온 우위를 확고히 하면서 예산과 사업의 절대적인 양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은 민선 7기 새천년 비전으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정하고, 6대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블루 에너지' 분야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중 우선 1단계로 신안 인지도 30km 해상에 조성될 3GW 사업과 관련 신안군,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와 사업 개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회에서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국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린 뉴딜 분야에 있어서 세부사업인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연구개발(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 모두 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회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남의 기간·핵심·미래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의 협조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산업·경제기반 업그레이드 위해 지역 역량 총동원해야=광주시, 전남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공조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 정부 안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 관료 조직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 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미래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세력 및 세대 교체가 이뤄진 광주·전남 정치권이 어떠한 비전과 정치력을 보여줄 것이지 될

지적인 시대에 올라드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광주·전남이 한국판 뉴딜의 간판으로 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 기업, 학계, 시민들이 뉴딜 연대 등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이 경제자유구역의 AI 클러스터, 한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밸리, 태양광, 해상 풍력 환경을 한국판 뉴딜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광주·전남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며 "모든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전남이 광주·전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말 아끼는 이낙연, 거침없는 김부겸

박원순 의혹에 "당이 입장 낼 것" "고소인 권리"



정책 토론회 촉사하는 이낙연 의원.



기자간담회 답하는 김부겸 전 의원.

민주당 당권 레이스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14일 당권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이 의원은 입장 표명에 신중 기조를 이어갔고, 김 전 의원은 보다 선명한 발언들을 내며 추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자 "당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피해 호소 여성 측 회견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시기가 되면 할 말을 하겠다"며 언급을 아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이번 박 전 시장 사안을 계기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피해 호소)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적 주장인지, 심정 표현인지는 조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재보선 공천에 대해서는 "우리 당헌·당규만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돼 버렸다"며 공천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재보선 판이 커지면서 당 대표 임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전 의원은 재보선을 전장 상황은 빗대 "전쟁 시 쪽 같이 애써온 지휘관이 있는 것이고 임시 지휘관이 있는 것이고 그 차이 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선에 출마할 경우 재보선 한 달 전인 내년 3월에 물러나야 하는 이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반면 이 의원 측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재보선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맞받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제정책 대전환 '한국판 뉴딜'에 국론 결집...문 대통령 후반기 국정동력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제시한 '한국판 뉴딜'은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임기 후반 국정동력을 살려가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다.

이제까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 성장을 3대 축으로 경제정책을 끌고 왔다면 이제는 첨단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그린 뉴딜'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연설에서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뉴딜'이라는 단어를 22번 사용하고, '변화'라는 단어 역시 13번 언급하면서 '문재인 경제정책 2.0'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후반기 정책을 한국판 뉴딜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환경변화를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우려가 심해지고 기존의 산업구조가 흔들리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글로벌 공급체계가 재편되는 시기에 발 맞춰 혁신형 선도경제로 체질을 개선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시장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읽힌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도 후반기

에 접어들었음을 고려하면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절박감도 읽힌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면 임기 막판으로 갈수록 국정 장악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실업 문제나 사회안전망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